

# “잣성 규모·성격 정밀조사 필요”

지난달 29일 도세계유산본부·전문가 현장 조사  
“상잣성보다는 다른 잣성일 가능성… 조사해야”  
본보 특별취재팀, 지난해 11월 첫 확인 집중보도

속보=본보 화진 특별취재팀이 지난해 제주시 봉개동 일대(옛 국영목장 3소장 지경)에서 처음 확인해 집중보도했던 잣성과 관련해 정확한 규모와 성격 규명 등을 위한 학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전문가 및 특별취재팀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 잣성이 분포하고 있는 봉개동 해발 580~600m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 강만익 박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위원)는 “밀림 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존 상태가 양호하게 잘 남아있는 것 같다”며 “1967년 당시 항공사진에는 해당 잣성이 상잣성과 옆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현재로서는 정확한 명칭을 붙이기가 힘들고, 학술조사 등을 통해 규모와 성격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특히 ‘제주읍지’(1785~1789)에는 제주목 관할로 마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3소장에 ‘횡장(橫牆)’을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아 횡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잣성은 상잣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횡장, 산마장 등일 가능성도 있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횡장으로 확인된다면 문헌자료가 뒷받침된 역사적으로나 문화재적 측면으로 대단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유산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와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 등을 통한 학술연구영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를 벌인 잣성은 지난해 특별취재팀의 집중보도(본보

11월 15일 5면, 16일 7면)로 처음 알려졌다. 특별취재팀은 탐사과정에서 길이 1.2km, 높이 140~170cm, 너비 140cm 안팎의 대규모 잣성을 확인하고 향후 행정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통해 규모 등 정확한 성격 규명과 함께 체계적 관리·보전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의 ‘2019 제주 목마 관련 잣성유적 실태조사(동부지역)’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향후 조사를 통한 규모와 기능, 성격 등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에 설치된 국영목장 10소장의 경계에 따라 돌로 축조한 담장으로, 크게 하 잣성 중잣성 상잣성으로 구분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 선임기자·백금락 부장



본보 특별취재팀과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들이 봉개동 일대에서 발견한 잣성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봄꽃구경 인파 서귀포유채꽃축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유채꽃 도로가 상춘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상국기자

# ‘준공후 미분양 주택’ 또 최고치 찍었다

제주 2월 기준 미분양 2485호 중 1227호 ‘악성’… 전달보다 138호 ↑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중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485호로 전달보다 단 1호가 줄었을 뿐이다. 지난 7월 이후 2400호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최악의 미분양 사태가 유지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중 소위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은 1227호로 전달보다 138호 12.7%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

고치를 갈아치웠다. 제주지역의 준공후 미분양 규모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1302호이며 제주는 경남 1251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해 말 1000호를 넘어선 후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도 중부공원 공동주택 등 768세대가 지난달 신규 분양에 들어가면서 준공후 미분양 해소는 쉽

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 들어 2월까지 1128호 규모가 공사를 시작했고 738호의 주택 인허가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신규 착공이나 인허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주택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월 제주지역 주택 매매량은 547호로 지난해보다 14.0% 늘었고 전월세 거래량은 2739호로 전년보다 10.6% 줄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 전국 시도교육감 4·3추념식 동시 참석

제주 4·3추념식 최초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동시 참석할 예정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9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다. 첫날인 2일 교육감들은 메종클레드제주호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한 뒤 안전 심의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뿐 아니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영학 도의회 의장도 참석한다. 협의회 개최 및 인사말까지 공개한 뒤 안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추념식 참석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번 일정은 4·3교육과 전국화의 의미를 담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김 교육감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18 추념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5·18 추념식날 광주에서 교육감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회의 후 추념식에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봤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에서 4·3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반려 가로수’ 한 그루 키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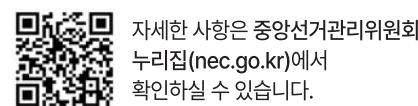
도, 연삼로 등 6개 구간 가로수 입양제 첫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 도시 녹화사업인 ‘반려가로수사업’을 첫 시행한다. 도는 제주도민이 가로수를 입양해 직접 돌볼 수 있는 ‘반려가로수 입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입양 대상은 6개(제주시 4, 서귀포시 2) 구간 2660m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와 녹지대다. 기업, 기관, 단체가 가로수를 입양해 실명으로 관

리한다. 6개 구간은 ▷우당도서관(사라동동길) 430m ▷롯데마트-제주일고 앞 교차로(1100로) 310m ▷만세국수-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연삼로) 640m ▷시민복지타운광장 앞(청사로) 280m ▷숲속의 컨벤션-염돈주유소(일주서로) 500m ▷염돈주유소-용흥교(일주서로) 500m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기관, 단체는 가로수 노선을 정한 후 도 산

림녹지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반려 가로수를 입양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22일까지다. 반려가로수 입양이 결정되면 도가 승인서와 안내판을 설치하며 관리 요령에 대한 컨설팅, 관리물품 등을 지원한다. 입양한 반려가로수에 대해 관리자는 도와 협약을 거쳐 물주기, 쓰레기 줍기, 녹지대 계절화 식재 등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직접 가로수를 정성스럽게 가꾸면서 나무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금락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

- 일시: 4월 5일(금)~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 선거일 투표

- 일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장소: 지정된 투표소
-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유효표·무효표 예시

#### 유효표

- 표 안이 매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인정되는 것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라인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기호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표를 하고 문자(종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문형(O,□,△,×,△ 등)을 기입한 것
- 구·사·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준비물: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종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 1인 2표: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